

1. 총평

2018년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는 기존 기출문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느꼈던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행정학 문제도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그보다는 국어, 국사, 헌법, 경제학 등의 난도가 높았고, 문제와 지문의 길이가 길어 행정학 문제 풀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난이도를 분석할 때, ‘중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는 7번(자주 출제된 내용이나 정책유지에 관한 개념이 약간 모호하여 혼란을 겪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음)과 18번(각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및 실태에 관한 문제로 기출문제에서 자세히 출제된 적 없음, 다만 알파행정학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 정도이다.

다만, 2번(엘리트론과 신엘리트론 구별), 10번(엽관주의 :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 14번(갈도-히스기준 : 재분배적 편익 고려 곤란), 20번(국세감면율 개념) 문제 등에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5번, 12번, 13번, 16번과 같은 법령 문제에서 암기를 소홀히 한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다.

행정학 한 과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국사, 헌법, 경제학과 같은 다른 과목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행정학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시험에서 행정학 점수가 85점 이상은 우수, 75점~80점까지는 보통, 70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고 본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1	개념문제	2
정책학	5	이론문제	10
조직이론	3	법령문제	8
인사행정론	4	학자문제	-
재무행정론	3	사례문제	-
지방자치론	4		
행정환류론	-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기초이론과 행정환류론 부분이 적게 출제되고, 정책학, 인사행정론, 지방자치론이 평균적인 출제빈도에 비해 많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항상 출제빈도를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개념 및 이론문제가 12문제, 법령문제가 8문제로서 법령 문제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다만,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되,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서 법령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하반기 지방직 7급을 보시는 분은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을 들으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자치론을 선택한 수험생은 꼭 듣기 바란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중상	7, 18.
중	2, 10, 14, 20
	3, 5, 6, 8, 9, 11, 12, 13, 15, 16, 17, 19
중하	2, 4

4. 당부 사항

1)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암기해주면 된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6.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 ②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 ③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 ④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외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해설] ②(옳음) 준실험은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모집단과 비슷한 상황에서 실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일반화의 가능성, 즉 외적 타당도가 높아지나,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낮아진다.

- ①(틀림)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 ③(틀림) ③은 외적 타당도의 저해요인인 호손(Hawthorne)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 ④(틀림) 내적 타당도는 실험 내에서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서, 정책(처치)과 결과 간의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달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내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외적 타당도는 조작화된 구성요소들 가운데서 우리가 관찰한 효과들이 당초의 연구가설에 구체화된 그것들 이외의 다른 이론적 구성요소들에까지도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내적 타당도 위협요인		외적 타당도 위협요인
외재적 요인	① 선발(선정)요인	① 표본의 비대표성 - 크리밍효과
내재적 요인	② 역사적 요소	②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③ 성숙요인	③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④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④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 호손효과
	⑤ 상실요인	⑤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⑥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⑦ 측정요인	
	⑧ 측정도구요인	
	⑨ 회귀인공요인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31-334

7.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② 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linear) 승계에 해당한다.
- ③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 ④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해설] ④(틀림) 정책혁신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새로운 정책의 채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혁신이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한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 ①(옳음) 정책유지(적응적 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정책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사업내용, 예산액수, 집행절차)들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대체 또는 변경해 나가는 변동 양태이다.
- ②(옳음) 정책승계의 유형 중 선형적 승계는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종결하고 같은 정책 영역에서 기존 정책과 같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지문 내용 중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것'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한 것은 기존의 정책수단을 종결하고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대체한 것에 해당한다.
- ③(옳음) 정책종결은 다른 정책에 의한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347.

8.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8 국가직 7급

- ㄱ. 동기부여의 강도를 산정하는 기본개념으로 유인가(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을 제시하였다.
- ㄴ. 직무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따라 조직원의 노력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든 직무를 다섯 가지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분했다.
- ㄷ. 개인은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이때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고 본다.
- ㄹ.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누고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다.
- ㅁ.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변화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해설] ①(옳음) 과정이론에는 ㄱ(Vroom의 선택-기대이론), ㄴ(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 ㄷ(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이 속한다.

한편, ㄹ(Alderfer의 ERG이론), ㅁ(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은 내용이론에 속한다.

<내용이론과 과정이론>

(1) 내용이론(content theory, 근거이론) :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내용이론의 핵심은 대개 인간의 욕구이론이다.

내용이론	Maslow	성장이론 : 욕구계층이론(생리, 안전, 소속, 존경, 자아)
	Murray	명시적 욕구이론 - 학습된 욕구(방향, 강도, 환경)
	Alderfer	생존-관계-성장(ERG)
	Herzberg	욕구충족요인이원론(불만-위생, 만족-동기)
	McGregor	X이론(불신관리), Y이론(신뢰관리)
	Argyris	미성숙인, 성숙인
	Z이론	① Lundstedt의 자유방임형 ② Lawless의 상황적응형 ③ Ramos의 괄호인(호형인, 비관적 이성형) ④ Ouchi의 Z이론(미국에서의 일본식 경영)
	McClelland	성취동기(need for achievement), 친교, 권력

(2) 과정이론(process theory) : 욕구가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과 동기가 행동을 야기하는 과정을 다룬다. 형평이론, 기대이론, 직무특성이론, 학습이론, 목표이론 등이 있다.

과정이론	공평이론	Adams의 공정성이론 : 준거인물 - 형평이론 : 호혜주의 규범, 인지일관성 정향
	기대이론	① Vroom의 선택-기대이론 ; 동기 = f(유인가, 수단성, 기대) ② Porter와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③ Georgopoulos의 통로-목표이론 ④ Atkinson의 기대이론
	직무특성이론	Hackman & Oldham :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 → 의미감, 책임감, 결과에 대한 지식 → 만족도, 성과
	학습이론	순치이론, 강화이론 : 강화, 회피, 소멸, 처벌 ① 행태주의자 학습이론 ㉠ Pavlov의 고전적 조건화 ㉡ Skinner의 조작적 조건화 ② 인지학습이론 : Tolman ③ 사회학습이론(행태주의 학습이론 + 인지학습이론) : Bandura
	목표이론	Locke의 목표설정이론 : 난이도, 구체성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42-452.

9.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 ② 내용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수행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 ③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며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하여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된다.
- ④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재시험법(test-retest)과 동질이형법(equivalent forms) 등이 사용된다.

[해설] ②(틀림) ②번 지문은 기준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타당성은 측정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얼마만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 ①(옳음)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 ③(옳음) 시험의 신뢰성은 측정 도구가 측정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한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하여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된다.
- ④(옳음)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시험법(test-retest), 동질이형법(equivalent forms), 문항 간 일관성 검증, 이분법 등이 있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55-557.

10.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직업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 ② 업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 ③ 대표관료제는 역차별 문제의 발생과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인사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 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해설] ④(틀림) 총액인건비제 시행 주관부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관리하고, 해당 부처에서 인건비 예산 총액의 한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예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인건비 간 아·전용 가능으로 인건비 규모 증대 가능성</li> <li>•적용 범위에 대한 부처 자율권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인건비 간 아·전용의 원칙적 금지로 총액인건비 규모 억제</li> <li>•총액인건비 내 대상 경비 간 전용은 각 기관장에 위임</li> </ul>
보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당 운영에 대한 자율권 없음.</li> <li>•과건공무원의 인건비를 원 소속 기관에서 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항목 내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조정 가능</li> <li>•절감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점수 추가 지급 가능</li> <li>•원칙적으로 과건공무원의 인건비를 과건받는 기관에서 부담</li> </ul>
기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 단위 기구 신설 시 상한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장급 이상 기구는 현행대로 직제로 규정하나, 과 단위 기구는 부처 자율 설치</li> </ul>
정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원 1명 증감에도 행정안전부 승인 필요</li> <li>•1명의 직급·직종 변경도 행정안전부 승인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제 정원의 3% 범위 내 자율 증원 가능(단, 초과원원이 없는 경우)</li> <li>•5급 이하는 자율로 계급별·직급별 정원 관리</li> </ul>
한시 기구 및 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안전부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시 기구 : 과 단위 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li> <li>•한시 정원 : 총액인건비 내 증원</li> </ul>

- ①(옳음)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직업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즉, 직업공무원제도는 내부 순혈주의(폐쇄형)에 대한 집착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을 저해해 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킨다. 또한 일반가주의(generalist)로 인해 전문화(specialist)·기술화를 저해한다.z
- ②(옳음) 업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정책수행과정의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말하는 능률성의 의미보다는 정치적 공약의 강력한 추진이나 중대한 정책변동에 대응이 유리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 ③(옳음)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균형인사정책)란 인종·성별·출신·종교·직업·계층·지역 등 여러 기

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 요소를 반영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인사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대표관료제는 대표관료제는 역차별을 낳고(수평적 형평성 저해), 사회분열(집단별 분리주의)을 조장하며, 실적주의 인사를 훼손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13-529, 592.

11. 지방재정의 구성 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
- ②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 ③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조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합성 유지

[해설] ①(틀림) 의존재원은 의존수입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수입을 말하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군·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의존재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조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합성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평준화·균질화를 이루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①번 지문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865, 882-887.

12.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ㄱ. 취득세	ㄴ. 자동차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인지세
ㄹ. 등록면허세	ㅁ. 주세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ㄹ, ㅁ

[해설] ④(옳음) ㄷ(종합부동산세), ㄹ(인지세), ㅁ(주세)은 국세에 속하고, ㄱ(취득세), ㄴ(자동차세), ㄹ(등록면허세)은 지방세에 속한다.

<국세의 종류>

국세(13)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지방세의 종류>

구분	도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특별시의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광역시의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871-872.

13.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가?

2018 국가직 7급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①	90일	40일	30일
②	90일	50일	30일
③	120일	50일	40일
④	120일	50일	30일

[해설] ③ 국가의 경우 정부는 120일 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은 50일 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은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회계연도	1월 1일~12월 31일	
출납 정리 기한(출납 폐쇄 기한)	12월 31일까지	
출납 기한(출납사무 완결 기한)	2월 10일까지	
예산 제출 기한	120일 전	광역 : 50일 전, 기초 : 40일 전
예산 의결 기한	30일 전	광역 : 15일 전, 기초 : 10일 전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640, 683.

14.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 ② 칼도-힉스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 ③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 ④ 재화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측정 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해설] ②(틀림)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하는 순현재가치법(NPV ; Net Present Value)은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큰 사업에 투자한다. 하나의 사업을 평가할 때에는  $NPV > 0$  일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NPV는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에 입각한 방법이다. 칼도-힉스기준은 어떤 변화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 의해 평가된 이득의 가치가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의해 평가된 손해의 가치보다 클 때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성 측면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사회적 편익이 100억인데 그 편익을 주로 고소득층에게 향유하고 사회적 비용이 90억인데 그 비용이 주로 저소득층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순편익이 10억으로 0보다 크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 ①(옳음)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즉, 비용편익분석은 실질적인 비용·편익이라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모두 비용·편익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옳음)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편익과 모든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 때, 총편익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즉,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편익비용 비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 ④(옳음) 비용은 자원의 투입에 따른 진정한 가치, 즉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잠재가격(shadow pricing)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것이 가상의 시장이기 때문에 재화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측정 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도 있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05, 275-280.

15.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②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④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④(틀림) 우리나라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위임받아 규정하고 있다.

- ①(옳음)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②(옳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③(옳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분상 의무	직무상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서</li> <li>●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대통령 허가 필요</li> <li>●품위 유지(직무 내외 불문)</li> <li>●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li> <li>●정치운동 금지</li> <li>●집단행위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실</li> <li>●친철·공정</li> <li>●종교중립</li> <li>●복종</li> <li>●직장 이탈 금지</li> <li>●비밀 엄수(퇴직 후에도)</li> <li>●청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충돌 방지 의무</li> <li>●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제도</li> <li>●선물신고제도</li> <li>●퇴직공직자 취업제한</li> <li>●재산공개 대상자의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 신고 및 처리 - 내부고발자 보호</li> <li>●비위면직자 취업제한</li> <li>●고충민원 조사처리</li> <li>●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li> </ul>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609-610, 618, 625-626.

16.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②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 ④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③(옳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채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채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6조.)

- ①(틀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틀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li> <li>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li> <li>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합의 보전</li> <li>4. 지방채의 차환</li> </ol>
---

- ④(틀림)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채 발행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① 외채 발행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한도액 초과 발행 :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방채 발행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880-881

17.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 ②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 ③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 ④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해설] ②(틀림) 참여예산제도는 통치의 시대에서 참여와 담론을 중시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또는 심의민주주의의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한 제도이다. 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제도로서, 국민이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 ①(옳음) 참여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 ③(옳음)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국가(중앙정부)에도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참여예산제도 도입>

- (1) 국민참여예산제도(중앙정부, 2017년 도입) : 정부는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 과정에 국민의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 (2) 주민참여예산제도(지방정부) :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후, 2006년에 지방재정법에 입법적 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2011년에 의무적 규정(시행하여야 한다)으로 바뀌었다.

- ④(옳음) 참여예산제도는 세계적으로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市)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635.

18. 정부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 ③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설] ③(옳음) 영국은 전통적으로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한정되는 제한적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는 월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①(틀림) 건국 초기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 권한을 명확히 한정하고, 주정부는 연방정부 권한 이외의 헌법상 금지되지 않은 권한을 포괄적으로 보장받았다. 이 기간 동안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재하였다.
- ②(틀림)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계층제적 관계로 파악하는 1868년 Iowa주 대법원 판례로서,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창조물이며, 주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이나 그러한 권한에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④(틀림)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행정적으로 집행하며 중앙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수직적 정부 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를 추구하면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828-830.

19. 민원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행정구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④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④(틀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경우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①(옳음)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법정민원이란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이와 같이 볼 경우 민원행정은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 ②(옳음)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민원 처리의 예외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③(옳음)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체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며, 이러한 민원은 행정구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624.

20. 「국가재정법」 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 ① 국제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제 수입총액 대비 국제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 ③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해설] ①(틀림) 국제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제수입 총액과 국제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제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제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옳음)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국가의 금전채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 ①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 ③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 ④ 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

- ③(옳음)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옳음)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647, 654.